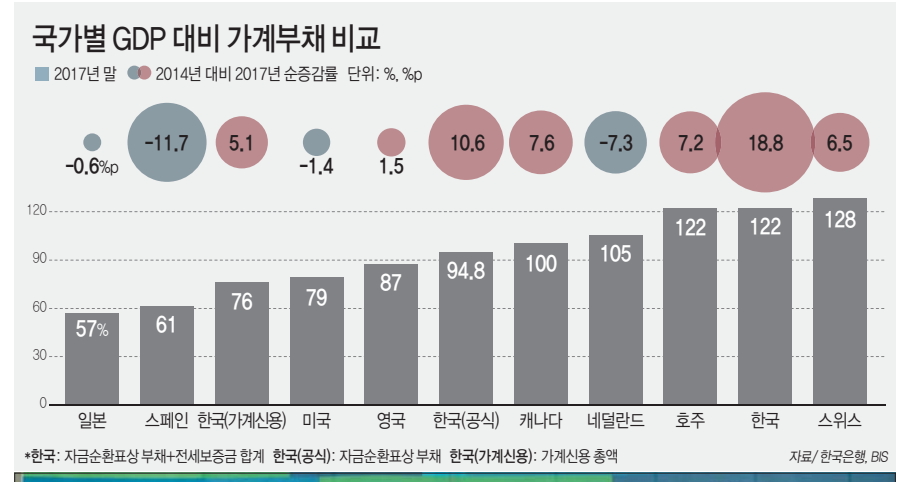
# 1514조 가계빚, 추가이자 2.5조 411만명 다중채무자 '시한폭탄'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 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란 개념을 통해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부채와 물가를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연합뉴스

##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 〈2〉 내년 경제부담 '부채'

**韓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흡사해**

**美 추가금리 인상땐 뇌관 터트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500조원으로 불어났다. 내년 기업들이 갚아야할 빚은 42조원(무보증 회사채)이 넘는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부채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가계빚 1514조… 韓경제 뇌관**

2019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징후는 '부채'다. 특히 미국이 추가금리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이 뇌관을 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눈덩이 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427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감안한 것이다.

왜 금리가 걱정일까.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411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이 금융사에서 받아온 대출이 493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6000가구(전체의 3.1%)이고 이들의 부채가 5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이 처럼 가계부채의 악몽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마다 과도한 가계빚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종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기업 빚 만기 42조, '복합충격' 우려**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은행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걱정이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부정적 관찰대상(watch list)으로 낙인 찍힌터라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공장 돌릴 돈이 궁한 형편이다." 한 중견 기업 재무담당 임원 A씨의 하소연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회사채 만기)은 42조119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경기는 바닥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금융권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해외 차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흥국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한 터라 수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자금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에 타격이 된다"면서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유동성마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다. '자산 버블 붕괴(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월드클래스 300인과의 대화. /배한님 수습기자

# 혁신성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월드클래스300기업인**

**"금융 관련 제도 바뀌어야" 토로**

중견·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기업인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으로는 투자유치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회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월드클래스300' 기업 대표 19명 등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규제와 법안, 금융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간담회는 월드클래스300 출범 이후 정치권과 함께하는 첫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안정적 경영을 위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덕 계양정밀 부사장은 최근 어려워진 자동차 부품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부사장은 "수소차, 전기차가 늘어난다 해도 2050년까지는 기존 매연기관차가 70%를 차지할 텐데 시장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채권 기한 한도를 늘여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우 평화산업 연구소장도 "정부가 보증한 기술 기반 회사라면 금융기관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며 "이런 투자 방식자체가 성공방정식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월드클래스300만을 위한 금융 제도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현 우진산전 사장은 "2012년부터 선정됐는데 (월드클래스300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다"며 "보증서 발행 시 선수금 출현 등에 있어 최소한 기업은행·산업은행에서라도 담보가 조금 부족해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 "게임출시 코앞인데… 52시간 맞춰 퇴근하라니"

**ICT분야 52시간 근무 토론회**

**근로시간 연장보다 유연성 강화 필요**

"판호(라이선스) 문제로 중국 게임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에 해가 되지 않도록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합니다."(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경우 하반기에 초과근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오픈이 코앞인데 52시간 맞춰 퇴근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 여파가 시스템통합(SI) 업체, 게임 업계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책을 손질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몰려있는 업계 특성 상 일괄적인 제도 도입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ICT 업계 관계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정산기간 연장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면 오히려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 도래한다"며 "SW 산업 특성 상 대형 프로젝트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현업이 돌아가는 중간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똑같이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용 여건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지식노동이 증가했는데 무조건 시간과 공간으로 근무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ICT 업계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ICT 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연 근로제의 일종으로 한 달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한 달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업계에서는 이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위 기간이 한 달이면, 대형 프로젝트가 몰려 바쁜 하반기에는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목소리다.

채효근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수주형 산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업 시간을 예측하지 못한다"며 "정산기간이 한 달로 돼 있는데 3개월, 6개월로 늘리는 등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